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2013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계획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인 '식물공장' 시범 추진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기획정보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요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양곡년도 쌀 소비량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2013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계획

※ 본 자료는 2013년 2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3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계획 발표」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현황

- **결성실적**(‘12년 말 기준): 18개, 총 3,300억 원(정부 1,627, 민간 1,673)
 - 연도별: (‘10) 5개 1,170억 원, (‘11) 6개 1,130억 원, (‘12) 7개 1,000억 원
 - ※ 투자분야: 농림수산식품 일반, 농림축산, 수산업, 식품산업, 8대 프로젝트, 소규모 경영체
- **투자실적**(‘12년 말 기준): 43건, 741.7억 원(결성금액의 22.5%)
 - 연도별: (‘10) 15건 370억 원, (‘11) 24건 316.4억 원, (‘12) 4건 55.3억 원
 - ※ 농업업체 투자실적 696억 원(39건), 비농업업체 투자실적 45.7억 원(4건)

□ 세부 운용 계획

- **[펀드결성]** 올해에는 7개, 9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결성
 -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반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농림축산펀드 2개(300억 원), 식품펀드 1개(150억 원), 수산펀드 1개(150억 원)를 결성
 - **투자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 지원을 위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경영체 전용 펀드**(2개, 200억 원)를 결성
 - ※ 올해에는 신규로 산업계와 농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1개, 100억 원 이상)**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 **[투자촉진]** 농식품펀드 결성이 본격화되고 펀드 조성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
 - **우선손실충당금 비율 하향 조정**: 결성총액의 8% → 5% 조정
 - ※ 정부출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펀드(농림축산 2, 식품 1, 수산 1) 결성 활성화 유도
 - **펀드 운용사의 최소출자비율 하향 조정**: 결성총액의 10% → 7% 조정

-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등)이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

-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던 우수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경영체에 대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상시화**하고, 직능·주제별 투자로드쇼 및 투자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투자대상 경영체 발굴 상시화**

- 농업인단체 및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투자처의 입체적 발굴과 함께 투자 로드쇼를 직능·주제별로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행사가 되도록 개편할 계획

○ **[사후관리]** 투자위험을 줄이고 투명한 펀드관리를 위해 투자관리 전문 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리스크관리 전담부서 신설**

- 투자가 이루어진 경영체의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투자펀드 사후관리와 투자펀드 전주기 관리를 보다 강화

주요 농정 이슈_2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인 '식물공장' 시범 추진

※ 본 자료는 2013년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인 '식물공장' 시범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국내 식물공장 운영 현황

○ 농촌진흥청 3개소(연구용), 민간기업 7개 업체(상업용 5, 홍보용 1, 연구용 1), 민간연구소 및 경기도원 각각 1개소(연구용) 운영

구 분		형 식	특 징
농 촌 진 흥 청	세종기지	인공광형 (15㎡)	- 연구용 - 원격으로 재배기술 모니터링(원예원) ※ 남극 세종기지 대원 부식용 엽채소 생산
	농업공학부	수직형(병용형) (50㎡) 빌딩형(인공광형) (396㎡)	- 연구용 - 파종~수확까지 자동화 시스템 구축 - 투입기술: 지열난방, 태양광발전시스템 - 작업공정 자동화 로봇화 연구 - 식물공장 모델 및 매뉴얼 연구 수행
민 간 기 업	인성테크	인공광형 (165㎡)	- 상업용 - 롯데마트, 신세계푸드 매장 등 5곳 설치 ※ 샐러드 카페 운영
	와이즈 산전	인공광형 (40㎡)	- 홍보용 ※ 광, 양액, 온습도 등 환경제어 전문업체
	(주)파루스	인공광형 (30㎡)	- 상업용 - 대학, 연구소, 건물 빌트인 규모로 납품 ※ LED광 일본 수출
	카스트 친환경농업	인공광형 (132㎡)	- 연구용 - 적상추 등 엽채류 재배
	리프레시함양	인공광형 (1,694㎡)	- 상업용(생산물 판매) - 토경재배, 느타리버섯 재배 • 돛형(곡선형 천정) 식물공장
	고려냉장식품	인공광형 (50㎡)	- 상업용(생산물 자체소비) ※ 일본 Alumis사 도입 설치
	그린플러스	태양광형 (50㎡)	- 상업용 • 온실시공전문업체 → 식물공장 사업확대 ※ 농진청 수직재배장치 기술이전
민 간 연 구 소	전주생물 소재연구소	인공광형 (221㎡)	- 연구용 - 인삼 등 특·약용작물 재배 연구
도 원	경기도원	인공광형 (162㎡)	- 연구용 - 이동식 재배장치(3축 리니어방식) - 양액, CO₂ 환경제어에 따른 생육특성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상추 등 물가변동 폭이 큰 엽채류를 포함,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장기저리 융자방식**(금리 1%,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
- **[사업자 선정]** 2월 말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은 후 기술수준과 출하계획 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 선정 계획
 - 금년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예산 중 우선 30억 원을 식물공장 시범 지원을 위해 배정하였으며, 향후 신청이 많을 경우 추가로 지원할 계획
 - ※ 30억 원은 165㎡ 기준, 6동 설치 가능금액(내부 설비 등에 따라 차이 발생)
- 이번 시범지원을 통해 **식물공장의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면밀한 경제성 분석을 병행하여 향후 상용화에 대비**할 계획
 - 그동안 식물공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표준 재배기술 및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민간 주도의 사업화에 한계**
 - 하지만 ‘90년대 중반 유리온실 사업을 계기로 민·관에서 **기초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
- 식물공장이 상용화되면, 도시에서도 계획생산과 연중 공급을 통해 유통 비용 절감은 물론 농산물 수급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식물공장’이란 시설공간에 인공광원(LED 등)을 활용, 온도·양분·수분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시스템

- 상추 등 엽채류의 경우,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10배~20배에 달하며, 수경재배를 통해 무농약 안전 농산물 생산 가능
- 협소한 면적에서도 고층·다단재배가 가능하므로 인구가 많은 도심 근처에 설치하여 유통비용을 절감, 특성성분을 함유하는 등 소비자 기호에 부응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2월 1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수출물가지수

- **[13.1월 수출물가]** 유가 및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1% 하락**(전년 동월대비 8.1% 하락)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1.2% 하락**
 - ※ 전년 동월대비 17.7% 하락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상승	배 1.1	배 19.2
	하락	냉동참치 -4.2, 신선어패류 -3.7, 냉동어류 -0.3	냉동어류 -23.5, 냉동참치 -30.0, 신선어패류 -33.0

- **(공산품)** 도제·전자표시장치, 석탄·석유제품 등이 올랐으나, 통신·영상·음향기기, 일반기계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전년 동월대비 8.1 하락)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0월	11월	12월	1월p2)	10월	11월	12월	1월p2)
총 지 수1)	1000.0	-2.1	-2.8	-0.7	-0.1	-6.5	-6.6	-7.2	-8.1
		<-0.6>	<-0.9>	<0.2>	<1.1>	<-2.1>	<-2.4>	<-1.0>	<-1.0>
농 립 수 산 품	4.3	-3.5	-2.6	-1.6	-1.2	-17.6	-17.2	-18.3	-17.7
공 산 품	995.7	-2.1	-2.8	-0.7	-0.1	-6.4	-6.6	-7.2	-8.1
섬유 가죽제품	41.9	-1.3	-2.0	-1.0	-1.0	-5.8	-5.3	-8.2	-9.4
석탄 석유제품	123.9	-3.3	-4.9	-1.1	1.1	-2.0	-7.7	-6.8	-10.2
화학제품	173.8	-0.9	-2.1	0.7	0.1	-5.7	-1.8	-2.5	-5.6
제1차금속제품	95.7	-2.0	-2.8	-1.7	-1.1	-10.2	-9.4	-9.8	-11.0
일반기계제품	90.8	-1.6	-1.9	-1.2	-1.2	-2.6	-2.9	-4.9	-6.0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125.8	-2.8	-3.7	-0.8	2.2	-10.7	-10.3	-9.3	-6.3

주: 1)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2) 잠 확정체제 도입으로 1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2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수입물가지수

○ **[13.1월 수입물가]**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8% 하락**(전년 동월대비 10.6% 하락)

- (원자재) 옥수수, 밀 등 농림수산물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유, 천연가스(LNG) 등 광산품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전년 동월대비 12.1% 하락)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0.5% 하락**

※ 전년 동월대비 6.9% 하락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상승	커피 1.3, 원면 2.5, 천연고무 3.1	대두 18.3, 밀 13.0, 콩 16.4, 밀 10.3
	하락	옥수수 -1.8, 밀 -2.2, 콩 -3.8, 돼지고기 -2.8, 냉장어류 -8.0	옥수수 -5.1, 원면 -14.9, 천연고무 -22.5, 돼지고기 -13.1, 냉장어류 -16.7

- (중간재) 반기계제품, 전기·전자기기 등이 내려 **전월대비 1.2% 하락**(전년 동월대비 10.4% 하락)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0월	11월	12월	1월p2)	10월	11월	12월	1월p2)
총 지 수	1000.0	-3.3	-3.0	-1.0	-0.8	-6.4	-7.9	-9.0	-10.6
		<-1.7>	<-1.1>	<0.0>	<0.6>	<-2.0>	<-3.8>	<-2.7>	<-3.3>
원 자 재	346.4	-5.4	-3.6	-1.1	0.1	-6.7	-10.6	-11.3	-12.1
농림수산물	21.6	-1.0	-2.1	-1.7	-0.5	-8.8	-5.7	-3.3	-6.9
광 산 품	310.3	-5.8	-3.9	-1.1	0.1	-6.5	-11.1	-11.7	-12.4
중 간 재	467.1	-2.1	-2.7	-1.0	-1.2	-7.0	-6.9	-8.1	-10.4
식 유 제 품	78.2	-2.5	-4.0	-1.3	0.1	4.0	1.0	-2.4	-7.6
화 학 제 품	98.1	-1.2	-2.1	-1.3	-1.8	-6.4	-4.5	-4.5	-7.2
비금속광물제품	36.4	-4.8	-3.1	-1.0	-1.1	-15.7	-15.6	-17.0	-17.6
1차철강제품	40.8	-1.7	-4.4	1.3	-0.4	-3.4	-5.7	-3.9	-7.4
1차비철금속제품	21.8	-2.1	-3.1	-1.9	-2.7	-9.7	-10.0	-12.0	-12.4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108.2	-1.6	-1.5	-1.2	-1.8	-10.2	-9.5	-11.4	-11.0
자 본 재	94.7	-1.6	-2.3	-1.4	-2.0	-5.4	-5.7	-7.7	-9.5
소 비 재	91.8	-1.3	-1.6	-0.7	-1.1	-2.4	-2.1	-3.5	-4.8

주: 1)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2) 잠·확정제제 도입으로 1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2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기획 정보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요

※ 본 자료는 다양한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 인수위, 정부 정책평가체계 전면 재정비 추진

○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시행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고 **현행 평가체계**의 **전면 재정비** 검토

- **‘사후 정책평가’·‘피드백’ 강조**(10대 90의 원칙 제시)하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의 **체계화·내실화**에 초점

※ 정부가 운용해온 정책평가 방식: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사후 심층평가, 국무총리실의 심사평가 등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개념) **대형 신규 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 (목적)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근거)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도입) IMF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정부의 부문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6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1999년 도입**

※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공공투자 관련기관인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처 등이 공동으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수립

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실화 추진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실시**(’05년), **’11년부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KDI)**을 통해 실시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12.11.26)을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보고
 -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현행 예비타당성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운영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부족, 포괄적·추상적인 면제기준 등 문제점을 제기
- 예비타당성제도가 **실질적인 장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고, **면제사업의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평가 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시행

- 2012년 운용지침은 비건설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일원화 및 기술성 분석 강화 등 그 동안의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1223일부터 적용'**
 -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
- 주요 개정내용

① 비건설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 그 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왔던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11.12.30,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계속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
 - ※ 기존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가 아닌 사업규모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절차

② 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일원화 및 신규 지침 적용

-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KISTEP으로 일원화**, '11.12월에 발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활용하여 **기술성 분석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예정

③ 낙후지역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 상향조정

- 경제성 분석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지역을 위해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15~30% → 20~30%로 상향조정**

④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검증 절차 간소화

- 각기 따로 조사를 실시했던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 타당성 분석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절차:
(현행: 3단계)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분석결과 검토의 3단계
(개선: 1단계)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 분석 및 분석결과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 이번 지침개정은 지난해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안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
-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할 계획

□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크게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각 제도 간 관계 및 역할>



자료: 성과관리센터_ <http://cpem.kipf.re.kr/>

- 그간 재정운용은 **투입 단계인 예산편성 등에 치중**하여 **사후적 성과관리 노력이 미흡**해 선진국의 성과중심 재정운용방식을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방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02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 추진(25개 부처 39개 기관)하였으나, 제도정착에는 실패함.

- 각 부처 일부 실·국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른 기관장의 관심 부족, 예산연계 미흡 등

- '03년부터 재정세계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도입 추진하게 됨.

1.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 (개념)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수행 흐름도>



자료: 성과관리센터 <http://cpem.kipf.re.kr/>

- (목표체계 설정) 조직임무에서 출발하여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설정
- (성과지표 개발)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 과거 실적치 및 재정 투입규모를 참고자료로 함께 제시
-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집행을 완료한 다음해(Y+1)에 예산집행연도(Y)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비표/분석,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활용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 (개념)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05년 시행)
- (근거)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 도입배경

- '03년부터 주요 재정사업이 많은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목표/지표 중심의 성과관리를 도입/추진하였으나, 예산 연계에 한계
 - 성과지표만으로는 사업의 특성, 집행상의 문제점, 성과부진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부족으로 예산편성 시 활용이 곤란
 - 그간 국회 등 많은 전문가들도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직접 재정운영에 환류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 '04년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부처의 자율적 예산 운용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산환류수단을 강화할 필요
 - 부처 스스로 사업별 자율평가를 통해 사업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평가결과를 예산 자율편성 시 반영
 - 기획재정부는 부처 자율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
- '05년부터 미국 PART* 방식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활용
 - *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각 부처가 5년 주기로 모든 사업을 자체 평가, 미 예산처(OMB)는 평가결과를 점검하고 예산편성에 활용

2) 평가제도 체계

- (평가결과 산출)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 * 5등급: 매우 우수(90점 이상) / 우수(90~80점) / 보통(80~60점) / 미흡(60~50점) / 매우 미흡(50점 미만)
-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예산 반영 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원칙'을 적용
 -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의무지출사업, ○○항만건설 등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된 사업 등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평가 도래연도까지 10% 이상 삭감 추진
 - '보통' 이상인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 예시: 사업목적 불명확 → 사업 재검토, 유사·중복 → 사업 통폐합 또는 연계 강화, 연례적 집행부진 → 불용실적을 감안한 예산삭감 등

3) 평가지표 및 평가과정

- **(평가지표)** 계획, 관리, 성과·환류의 단계별 11개 공통지표, 정보화 특성 지표 2개로 구성
 - 사업 부문(2개): 일반재정, 정보화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구분(점수)		평가지표
계 획 (20)	사업 계획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 계획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 리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3-정보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가? 3-정보화②.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성 과/ 환 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2013.1.14)

- **(평가과정)** 부처의 자체평가 및 기재부 확인·점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 평가지침 통지(12월, 기재부 → 각 부처) →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1~2월 말, 각 부처 → 기재부) → 확인·점검*을 통해 부처 평가점수 수정(3~5월 말, 기재부)
 - ※ 조세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필요 시 현장 실사 병행

3) 주요 일정

- 기획재정부, 각 부처가 **2012년에 추진한 재정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13.1~5월간 실시**해 각 부처의 재정운용 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 각 부처 자체 평가결과 제출('13.2.24) → 기획재정부 확인·점검 및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보고('13.3~5월 말) →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 마련 및 각 부처 통보('13.6~7월)
 -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3.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 (개념) 재정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의 운영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05년 시범운영**을 거쳐 **'06년도에 도입**
- (근거)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 평가제도 체계

- **'05년 이후 '10년까지 총 49개 사업(군)**에 대해 **심층평가**를 **추진**했으며, **'11년에는 총 8개 사업군***을 선정하여 평가

※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지역산업발전 지원, 저출산 대응, 도로 교통안전 지원,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대상사업(국가재정법시행령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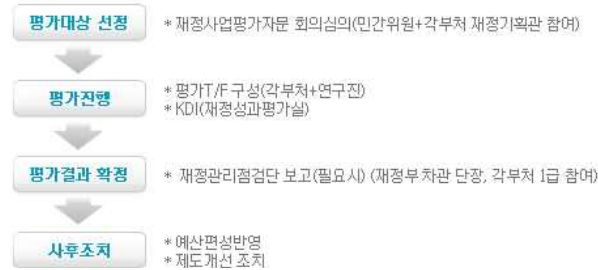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 특히, **'11년부터**는 목적이나 대상이 유사한 개별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평가하는 **사업군 단위 심층평가**를 **본격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효율화를 위해 **심층평가를 강화**
- 심층평가를 통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및 재정 투자 방향 재설정, 부처 간 역할 분담 등 실질적인 **지출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2) 평가제도 절차

- 사업평가의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평가 수행함.
 - 기획재정부의 성과관리심의관을 추진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과장, 관련 부처 담당자, KDI의 연구진 등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단을 구성하여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심층평가를 실시함.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수행 흐름도>



자료: 성과관리센터_ <http://cpem.kipf.re.kr/>

3) 주요 평가 요소

구 분	주 요 정 책
1. 적절성 (relevance)	- 사업은 정부의 역할로서 적절한가?, 사업수행방식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가?
2. 효율성 (efficiency)	- 여러 투입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 및 중간결과로 전환되었는가?
3. 효과성 (effectiveness)	- 사업의 결과로서 사업의 특정목표 및 일반목표가 달성되었는가?
4. 효용성 (utility)	- 사업의 결과 실제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5.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사업 중단 시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자료: 성과관리센터_ <http://cpem.kipf.re.kr/>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_ www.mosf.go.kr/
- 한국조세연구원_ www.kipf.re.kr/
-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_ <http://cpem.kipf.re.kr/>
-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 (2013.1.11)
- 기획재정부_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2013.1.)
- 국무총리실_보도자료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 개최」 (2012.11.22)
-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시행」 (2012.1.26)
-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재정사업 심층평가 워크숍” 개최」 (2011.12.21)
-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_ 「2011 공공기관과 국가정책_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평가 및 개선과제」 (2011.12.30)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2월 12일~15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돼지수매 요과 없고 생산량 증가 약재 겹쳐...농가 '우울'

- 자조금까지 동원한 **도매시장 돼지 수매사업 효과 미비**한 가운데 농경연, **2~7월 국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량이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 전망해 양돈농가 우울. 농식품부의 사업시행승인으로 1.7일~2.28일까지 시행되는 도매시장 수매·비축사업에서 1.28일부터는 수매 규모를 기존 일 1,500두 → 3,000두로 늘렸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요지 부동 낮은 시세**를 형성. 수매사업이 재개된 1.21~25일까지 도매시장 kg당 평균지육가격은 박피 2,890원~3,057원·탕박 2,959원~3,024원, 1.28~2.5일까지 가격은 박피 2,904원~3,149원·탕박 2,794원~2,996원. 이 같은 가격은 농식품부가 지지기로 한 탕박 3,500원·박피 4,00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농가가 현장에서 느끼는 생산비 수준인 4,300~4,500원 선에는 턱 없는 가격. 반면 **돼지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대비 38% 감소**하면서 **이달부터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승폭은 낮을 것으로** 전망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2.11)

□ 양채류 생산성 외복 '가격 내리막'

- 한파로 생육이 지연됐던 **양채류의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도매시장 출하물량** 급증. 양채류 중 최근 물량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 **▲브로콜리...공급과잉**(수입물량까지 증가)으로 **시세 하락** 심각. 추위로 생육이 정체됐다가 기온상승으로 한꺼번에 성장해 1월 말부터 출하량 대폭 증가. 1월 초까지 추위로 가격이 강세를 형성하자 수입업체들이 브로콜리 수입에 대거 뛰어들면서 물동량은 더욱 증가. **브로콜리 8kg 1만원(2월 둘째 주) 형성. ▲양상추...물량증가로 인한 시세 하락**으로 **평년(1만8,000원)보다 약 40% 가량 낮은 1만1,000~1만2,000원(1월 말)**. 이런 가운데 2월 초 설 명절 영향으로 **제수용품 소비 집중과 외식 소비 감소**로 재고물량도 상당해 **명절 이후에도 약세는 지속될** 전망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2.11)

□ 엔저...대일 농산물 수출 은둔

- 원·엔화 환율 급락...채산성 악화로 화훼류 등 수출 급감. 농식품부, 올해 1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6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9% 증가했으나 대일수출은 ▲화훼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장미의 경우 수출액이 230만 달러('12.1월) → 120만 달러('13.1월)로 절반 가량 감소, 같은 기간 백합 170만 달러 → 120만 달러로 27.6%, 국화 50만 달러 → 40만 달러로 27.3% 감소. ▲가공식품의 대일 수출도 감소...유자차 대일수출은 180만 달러('12.1월) → 140만 달러('13.1월)로 19.8% 감소, 김치와 막걸리의 대일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7.1%, 63.1% 감소. 다만 ▲파프리카...국내 생산량 증가로 대일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3.7% 증가. 일본은 앞으로 엔저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농식품 수출 확대에 차질이 우려

자료 : 농민신문(2013.2.15)

□ 사료직거래 자금 1,700억 원 지원

- 농식품부, 최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1700억 원 지원계획 확정. ▲지원대상...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신청 가능.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가당 지원한도...양돈 4,000만 원,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3,000만 원, 기타(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 1,000만 원, ▲한마리 당 지원단가...한·육우 30만 원, 낙농 65만 원, 양돈 7만 원, 양계·오리 4만 원, ▲지원조건...100% 융자(연리 3%)로 2년 일시상환 조건. 사업자금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3월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대출기관(농·축협 등)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에 신청

자료 : 농민신문(2013.2.15)

□ “영농일지 미비” ... 무더기 친환경인증 취소 ‘시골’

- 영농일지* 미비로 담양지역 전체 친환경인증농가의 42% 인증취소 위기. 2.6일 전남도와 담양지역 농가들에 따르면 담양지역 1,047농가, 696.3ha(유기농 105.6ha, 무농약 590.7ha)에서 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전남대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로부터 지정 3개월 만에 무더기 취소. 취소된 면적은 담양지역 친환경 쌀 인증면적 10,631ha(유기농 314ha, 무농약 1,317ha)의 42.1%. ▲인증취소 사유...보통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농약검출 등 규정을 어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인증 취소 사유는 영농일지 빼기기. ▲전남대측 입장...영농일지는 개별 농가에서 작성하게 돼 있는데 영농일지가 10여개 유형으로 나뉘어 모두 복사해 첨부되는 등 명백하게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 ▲농가 및 지자체 입장...친환경인증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에 맞게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영농일지를 간소화하는 대신 잔류농약검사 등 실질적인 검증 과정을 확대할 필요, 고령화가 심각하고 글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인증기관이 서류에만 집착. 제도개선 필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때 농가에서 인증기관에 반드시 제출하는 것으로 작업시간, 작업면적, 관수량, 수확량, 영농 자재비, 선별, 포장, 운반 등의 내용을 기재. 인증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영농일지 작성은 필수라고 강조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2.11)

□ 농촌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농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통계청, 2.6일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1만2,000원), 중소도시(23만4,000원), 광역시(23만 원), 읍·면지역(15만 원선). (도시) 학원 밀집, 개인 또는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등이 활성화돼 사교육 참여가 높고 ↔ (읍·면) 교육 환경 열악, 도시 근로자보다 소득수준이 낮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농촌지역에서는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들의 참여 저조. 실제 유상으로 진행되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농촌지역이 많은 강원 32.9%, 전남 35.4%, 경북 43.4% 등으로 전국 평균(44.1%)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는 경북 12.8%, 전남 16.8%, 강원 17.9%. 학교 참여율이 낮은 것은 방과후수업을 진행할 전문 인력 부족과 열악한 농가소득을 감안해 무료 또는 최소한의 경비로 진행해야 하지만 농촌학교의 재정 부족으로 방과후학교 자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2.14)

연구 지원 정보

2012양곡년도 쌀 소비량 조사

※ 본 자료는 2013년 1월 3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양곡년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 2012양곡년도²⁾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9.8kg으로 전년대비 (71.2kg) 1.4kg 감소(△2.0%)
 - 대체식품 및 즉석가공식품의 다양화로 식생활이 간편해짐에 따라 가구 부문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2006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80kg 이하로 감소한 이후 6년 만에 70kg 이하로 하락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증감 추이>

단위: kg, %

구 분	200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비량	87.0	78.8	76.9	75.8	74.0	72.8	71.2	69.8
전년대비 증감률	-2.1	-2.4	-2.4	-1.4	-2.4	-1.6	-2.2	-2.0

□ 농가비농가별 1인당 쌀 소비량

- 농가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111.2kg으로 전년대비 4.1kg(△3.6%) 감소, 비농가는 67.0kg으로 전년대비 1.3kg(△1.9%) 감소
 - 농가(111.2kg)에서 연간 1인당 소비하는 쌀의 양은 비농가(67.0kg)의 1.66배

<농가·비농가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단위: kg, %

구 분	200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증 감 률
평 균	87.0	76.9	75.8	74.0	72.8	71.2	69.8	-2.0
농 가	136.6	127.6	122.5	119.0	118.5	115.3	111.2	-3.6
비농가	82.6	73.3	72.4	70.9	69.8	68.3	67.0	-1.9

□ 사업체 쌀 소비량

- 2012양곡년도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원료로 소비하는 쌀은 570천 톤으로 전년대비(646천 톤) 75천 톤 감소(△11.6%)
- 쌀 소비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주정제조업에 기인
 - 전년도 쌀을 가장 많이 사용한 주정제조업체의 쌀 소비량이 96천 톤 감소해 떡류제조업의 쌀 소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량은 감소
- [업종별 소비] 떡류제조업(183천 톤) > 주정제조업(148천 톤)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74천 톤) > 탁주 및 약주 제조업(61천 톤) 순
 - 이들 4개 산업의 쌀 소비량이 전체 사업체 소비량의 81.9%를 차지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1) 조사기간: 2011.11.1 ~ 2012.10.31
조사대상: 1,559가구(농가 560가구, 비농가 999가구), 3,020개 사업체(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2) 햅쌀이 생산되는 전년 11월 1일부터 이들 쌀에 대한 소비가 마무리 되고, 금년 햅쌀로 수요가 이동하기 전인 당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